

비상경제장관회의

24-6-2

(공개)

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 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

2024. 3. 28.

관계부처합동

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(요약)

I 추진배경

- 저출산·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심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 저하 초래,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
 - 농촌지역 소멸현상이 더욱 심각하고, 농업생산 위기, 농촌공동체 해체 및 인접 도시 연쇄적 쇠퇴 등 국가적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대응 필요
 - * 농촌 읍·면 인구는 '22년 961만명에서 '50년 845만 명으로 감소(약 12%↓), 총인구('22대비 '50년 약 9% ↓)보다 가파른 감소세 전망
- 한편, 스마트기술 발달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으로 정주, 창업, 휴양의 공간으로서 농촌의 잠재력이 새롭게 조명
 - 쾌적한 환경, 도시대비 저렴한 비용 등으로 농촌 창업이 증가하고, 다양한 목적의 귀촌, 농촌관광, 위케이션 수요 증가

⇒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농촌소멸 위기 완화 및 농업·농촌정책 전환 추진

II 추진방향

-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“**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**”을 모토로 **3대 공간 전환** 추진
 - 농업 생산과 인구 유지를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, 사람·기업·농촌자원이 융복합되는 구조 형성
 - ① 청년층, 혁신가, 기업가, 농업인 등이 모이는 「창의적 공간」
 - ② 농촌공간 테스트 베드화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「스마트 공간」
 - ③ 주거·산업·서비스 등이 집적화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「네트워크 공간」
- 농촌공간계획을 플랫폼으로 새로운 농촌을 계획하고 지역주민 등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, 관련 제도 및 규제 혁신

Ⅲ

비전 및 전략

비전	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, 일하고, 쉬는 새로운 농촌		
목표	◇ 농촌 청년인구 22% 유지 : ['23) 21.4% → ['27) 22.0 ◇ 농촌지역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늘리기		
전략	◇ 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 대전환		
	전략1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전략2 농촌 체류 · 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	전략3 주민 · 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
	자율, 연대 · 협력, 융복합, 규제혁신		
원칙	자율, 연대 · 협력, 융복합, 규제혁신		
	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	
	②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		
	③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		
세부 과제	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	
	②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		
	③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		
	④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		
추진 기반	농촌공간계획, 농촌소멸위험지수,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		

IV 추진방안

1. 농촌공간 및 자원활용 극대화를 통한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

◆ **농촌형 비즈니스 및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(Agribiz⁺)을 활성화하고,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농지·산지 활용 입지수요 충족**

□ 청년, 혁신가, 기업 등을 위한 경제 기회 창출

- **(청년농)** 안정적 영농 진입에 필요한 농지·자금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, 전문농업인으로 성장*을 위한 교육·자금 등 지원 강화
* CEO양성과정('24: 280명), 영파머스펀드('24: 200억원), 우수후계농자금('24: 500명)
- **(농촌창업)** 청년들의 다양한 농촌형 비즈니스* 확산을 위해 교육, 실증 등 복합공간 갖춘 시·군별 '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(Complex)' 구축
 - 자원조사부터 창업자금·컨설팅 및 보금자리주택 등 종합 지원
 - * 로컬푸드, 농촌관광, 마을 브랜드 등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
- **(창업·혁신 기업)** 기술 실증 희망기업 대상 마을 공유자원 등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'스마트농촌 리빙랩' 추진

□ 농촌경제 및 Agribiz⁺ 혁신 모델 구축 및 기반 조성

- **(농산업)** 원료조달, 제조·가공 등 농업 전후방 산업(Agribiz⁺) 기반을 연계·집적화한 시·군 단위 '농산업 혁신벨트' 구축
- **(민간투자)**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적용가능한 읍·면 단위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및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
- **(농지·산지)** 자투리 농업진흥지역(3ha↓) 단계적 해제(전국 2.1만ha 추정) 및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(3.6천ha 추정)
 -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
 - * 평균경사도(25도 이하→30), 표고(산 높이 50% 미만→60), 입목축적(사군 평균 150% 이하→180) 등
- **(네트워크)** 창업·혁신 아이디어 확산을 위한 민간 자율 네트워크 활성화 및 특산물·문화·유희시설 등 지역자원 정보 통합 안내

2. 농촌 경제·체험·거주 기반 마련으로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

◆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빈집 재생을 통한 4도3촌 라이프 확산 및 민관협력에 의한 위케이션 · 체류형관광 활성화

□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

- (체류형 쉼터 등)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(「농지법」 개정)
 - 거주공간, 농장, 체험프로그램 등을 함께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 조성 병행
- (빈집활용) 지역, 대상 등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* 및 매매가능한 농촌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 연계 등으로 거래 활성화
 - * ①지역 확대(5개도→ 전국), ②대상 확대(50채→ 500), ③영업일 수 제한(300일) 폐지 등
 -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기업·지자체 합동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 등 농촌빈집을 도시-농촌 교류공간으로 조성
 - * 농촌빈집의 체계적 관리·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('25)

□ 농촌 · 산촌 관광 활성화

- (위케이션·치유관광)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 위케이션 활성화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, 인력양성 등 치유산업 발전방안* 마련('24)
 - * 치유농업 시설 및 관련 농업·농촌 자원 연계,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
- (체류형관광)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투자를 결합한 특색있는 농·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·확대
 - * 외식·지역개발 기업 등과 지자체 공동으로 지역 미식벨트와 연계한 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, 민간자본 활용 동·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 등
- (서비스품질) 농촌민박 규모 등 운영 요건 개선 및 농촌체험마을 시설·서비스 등급제 활성화 등 숙박 서비스·안전성 제고 지원
 - * 위생·안전 점검 컨설팅, 객실·시설 등급 평가,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등

□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

- (정보제공) 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 대상으로 빈집, 농지, 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위한 「농촌 3대은행」 운영

* '빈집은행'을 통한 빈집정보 제공 및 '농지은행'은 농지 매입·임대 지원, '재능은행'은 도시민 등 재능 활용 지원

- (가치공유)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가기 등 세대간·도농간 연계 및 농업·농촌 가치 확산

- (기여·협력) 기업들의 ESG 경영의무 기조 반영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* 활용, 지역농협 등의 도농상생 사례 확산

* 농촌 교육·장학사업, 주민 복지 증진, 농촌개발 및 활성화, 민간기업과 지역 협력사업 등

3. 관계부처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

◆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**농촌공간계획**을 통한 **생활공간 재구조화** 및 **주민주도·민간협력·스마트기술 활용**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□ 주거, 일자리,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

- (공간 재구조화) 139개 시·군별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삶에 불편 없는 생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수립

- (지역주도계획) 주민제안 등을 반영한 지자체 자율 계획수립 및 계획에 따른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농촌협약 제도 본격 추진

*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타부처 사업, 지자체 사업, 민간 투자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

□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

- (공공병원) 농촌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·장비 지원 및 의료인력 보강

- (농촌형의료) 찾아가는 '농촌 왕진버스' 운영 및 농촌 의료·돌봄 거점마을* 육성,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 등 의료 접근성 제고

* 복지시설, 농장, 주민교류센터 등에서 의료·돌봄 통합서비스 제공

□ 농촌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

- **(농촌학교)**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촌학교 운영 모델 확산 및 농촌유학 활성화*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·협력(교육청·지자체 등) 등
 - * (기존) 농촌유학센터 중심 → (개선) 가족체류형, 홈스테이형 등 수요자 맞춤형 확대
- **(공동체협력)** 유아 돌봄·평생교육 시설 확보 등 읍·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지원* 및 농촌체험시설과 늘봄학교 연계·협력 확대
 - *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에 학교복합시설 1개 이상 설치 목표('23~'27)
- 유희시설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주민 참여 확대 추진

□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- **(주민주도)**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등('24: 130개)을 통한 부족한 서비스 직접 제공, 민간협력 등 지역 여건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확산
 - * 반찬나눔 활동, 셀프 빨래방 운영, 집수리업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
- **(스마트기술 활용)**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 응답형 운송 서비스 추진, ICT 기반 스마트커뮤니티 센터* 구축
 - *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여 돌봄, 생활 서비스 등 제공
- **(민간협력)** 유희시설 등 농촌자원을 연계하여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

V 추진 기반

- **(농촌소멸대응 플랫폼)** 재생활성화지역, 특화지구, 서비스 전달체계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앙·지자체 계획 수립
 - * 국가 기본방침('24) 및 139개 시·군 기본계획 수립('25~)
- **(제도기반)** 읍·면 인구구조, 농업·농촌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소멸위험도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
 - 광역 단위 (가칭)농촌센터(Rural Planning Center)의 단계적 설립 유도
- **(범정부 추진체계)** 농어업인 삶의 질 계획(21개 부처·청 참여)을 소멸 대응 중심으로 전환하고, 범부처 협력을 위한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

VI 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일정	소관부처
1.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	
[1] 청년, 혁신가, 기업 등의 창업 기회 창출		
○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강화	'24.上	농식품부
○ 청년의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	'25.上	농식품부
○ 농촌 창업·혁신 기업 성장 지원	'24.上	농식품부
[2] 농촌경제 및 Agribiz+ 혁신 모델 구축		
○ 농산업 혁신 벨트 조성	'25.上	농식품부
○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	'24.下	농식품부
○ 농지·산지 입지 수요 충족	'24.下	농식품부·산림청
[3] 농촌경제 및 Agribiz+ 활성화 기반 조성		
○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붐 조성	'24.上	농식품부
○ 농촌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 구축	'25.上	농식품부
○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	'24.下	농식품부
2. 생활인구·관계인구 창출		
[1]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		
○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및 살아보기 체험농원 등 도입	'24.下	농식품부·산림청
○ 농촌빈집 정비·거래·관리 등 활용 활성화	'24.上	농식품부
○ 도시-농촌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빈집 재생	'25.上	농식품부
[2] 농촌·산촌 관광 활성화		
○ 농·산촌 워크케이션 및 치유 관광 활성화	'24.上	농식품부 산림청·농진청
○ 농·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	'25.上	농식품부·산림청
○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	'25.上	농식품부
[3]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		
○ 도시민 등을 위한 농촌정보 제공 확대	'24.下	농식품부
○ 미래 세대 및 전 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공유	'25.上	농식품부·농협
○ 기업, 단체 등 민간의 농촌기여·협력 촉진	'24.上	농식품부
3. 농촌 삶의질 혁신		
[1] 주거·일자리·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		
○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	'24.上	농식품부
○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통합 지원	'24.上	농식품부
[2]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		
○ 농촌에 이용가능한 병의원 시설·인력 지원 강화	'24.上	복지부
○ 농촌 의료분야 민간협력·방문 서비스 등 활성화	'24.上	농식품부·복지부
○ 농촌주민 등을 위한 특화된 돌봄·의료 서비스 제공	'25.上	농식품부
[3] 농촌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		
○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체제 구축	'24.下	농식품부
○ 농촌공동체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	'25.上	농식품부·교육부
[4]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		
○ 농촌주민 자조·자립 기반의 서비스 공급	'24.上	농식품부
○ 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·복지·교육 서비스 확충	'24.上	농식품부
○ 유희시설 등 농촌자원 활용한 민간역량 시너지 창출	'25.上	농식품부

순 서

I. 추진배경	1
II. 농촌 인구구조 전망 및 과제	2
III. 농촌소멸 관련 정책 현황 및 평가	4
IV. 농촌소멸 대응 추진방향	7
V. 세부 추진방안	9
VI. 정책 추진기반	19
VII. 기대효과	20
[참고] 과제별 추진 일정	21

I. 추진배경

□ 인구감소시대,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

-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라 지역 간·도농 간 인구구조, 경제·사회적 인프라 및 서비스 불균형 심화
 - * 228개 시·군·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정('21년 행안부)
- 도시 인구집중 등은 출산, 주택, 교통, 환경 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하여 국가잠재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

□ 지역소멸은 농업·농촌 소멸을 의미하는 등 농업·농촌의 가장 큰 도전과제

- 농가 및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, 경영주 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되는 등 농촌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
 - * 농가인구/65세 이상 비율: ('00) 403만 명/21.7% → ('10) 306/31.8 → ('22) 217/49.8
- 농촌소멸은 농업생산 위기 및 농촌공동체 해체, 인접 도시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 경제·사회적 성장 등에 악영향

□ 한편, 저성장 기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촌의 잠재력 새롭게 조명

- IT, 스마트기술 발달과 비대면 문화 확산 등에 힘입어 농촌 공간에서 일과 여가 병행, 유희시설 활용 창업 등 새로운 기회 대두
 - * 도시근로자들 중 59% 이상이 농촌 스마트워크 마을 이용 의향 있음(KREI)
- 가치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은퇴세대 이도향촌 선호분위기 확산, 주말농장 및 농촌 주거에 대한 관심 지속 증가
 - * 농촌관광 경험률: ('04) 7.7% → ('16) 24.4 → ('22) 35.2(농진청, 농촌관광실태조사)
- 일본,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소멸에 따른 경제·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책에서 농촌의 중요성 강조
 - * 일본('15~ 지방창생정책) / 프랑스('19, 농촌아젠다, '23, 프랑스의농촌)

☞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관심 및 기대를 바탕으로
농촌소멸 위기 완화 및 농업·농촌 대전환 추진

Ⅱ. 농촌 인구구조 전망 및 과제

1 인구구조 변화 및 위기요인

□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는 지속될 전망



○ 농촌 읍·면 인구는 총인구보다 가파른 감소세 전망

* 농촌인구: ('22) 961만 명 → ('50) 845(약 12% ↓) / 총인구: ('22) 5,167만 명 → ('50) 4,711(약 9% ↓)

○ 양질의 일자리 부족, 교육 여건 열악, 문화·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젊은 층 이탈 지속,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

* 농촌 고령화: ('22) 25% → ('50) 30.7

□ 농촌 내에서도 수도권·비수도권, 읍·면별로 다양한 양상 전개

○ 비수도권 면 지역에서 도시 근교 읍 지역으로 인구 이동

* 읍/면별 고령화율: ('00) 9.6/18.1% → ('10) 13.5/27.8 → ('22) 18.4/32.4

* 경남 거창군(인구총조사): 총인구 11% 감소('00) 65,963명 → ('22) 58,702), 읍인구 9.7% p 증가('00) 56.5% → ('22) 66.2)

○ 수도권 또는 도시 근교는 주거개발 및 전원생활 수요로 인구 증가하는 등 중산간 지역과 양극화 발생

□ 인구 유출에 따른 공동화·유평화로 공동체 기반 약화

○ 중심지(읍면 소재지) 서비스 공급 기능 약화 등으로 일상적 생활에 불편 겪는 배후 지역 증가

* 인구 1,000명 이하 읍·면(39개)은 민간 병원, 약국 無
이·미용실, 목욕탕, 일반음식점이 없는 읍·면도 약 70% 수준(KREI, '23)

○ 인구감소에 따라 농촌지역 주거, 생산 등 공간 축소 및 빈집 등 유평 자원, 노후주택 등 증가

* 토지 면적 중 농경지, 주거·상업·공장, 문화·체육·휴양지역 비중
: ('20) 31.4% → ('30) 28.9 → ('50) 22.5(KREI, '23)

* 농촌빈집: ('15) 49천동 → ('20) 56 → ('22) 66(지자체 행정조사)

* 30년 이상 노후주택: (농촌) 29.8% / (도시) 21.7

□ 농촌소멸은 경제적·사회적 성장·발전 등에 연쇄적 악영향 초래

- 인력부족 영향 등으로 중산간 지역 등은 한계농지 및 유휴자원이 증가하고, 후계 농업경영 인력난 초래
 - * 경지면적('20년간 18.4%↓): ('00) 1,918 천ha → ('10) 1,715 → ('20) 1,565
 - * 농업경영자수(청년(20~39세) 비율): ('00) 138만 명(6.6%) → ('10) 118(2.8) → ('20) 104(1.2)
- 배후 읍·면부 인구 공동화는 중심도시 기능 쇠퇴로 연결
 - * 읍·면부 인구증가율 하위 20개 도·농복합시(비수도권) 중 17개에서 중심도시 인구감소
 - * 배후 농촌지역 공동화가 심화되는 전남·북, 경남·북에서 광역권 중심도시(광주, 대구, 부산 등)의 인구감소율도 높음
- 배후마을, 중심지, 지방도시 간 기능적 연계 악화 및 쇠퇴의 악순환 지속시 심각한 경제적·사회적·정치적 문제 우려



2 농업·농촌 기회요인 및 과제

□ 지역소멸 등 위기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창업, 휴양 등 활발

- 쾌적한 환경, 도시대비 저렴한 비용 등으로 농촌에서 경제활동 선호 증가
 - 농촌 소재 농식품 분야* 창업 증가율이 전국을 상회
 - * 신규 창업 수: ('10) 990건 → ('15) 1,596 → ('21) 3,312
 - 창업 연평균 증가률('10~'21년): (농촌) 11.6%/ (전국) 7.5
-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환경·경관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누리는 공간으로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
 - 다양한 목적의 귀촌, 농촌관광, 위케이션 수요 꾸준히 증가

□ 농촌소멸 해소는 농업·농촌 및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이자 시급한 과제

- 농촌소멸 등 사회구조적 변화를 예측하여 농업·농촌 구조를 혁신하고, 미래형 농촌 구축할 필요
- 농업·농촌 공간을 활용하여 일자리, 주거, 복지 등 도시 문제 해결 및 휴양 등 국민적 기대에 부응

Ⅲ. 농촌소멸 관련 정책 현황 및 평가

1 관련 국내 정책 현황

□ 농촌 삶의질 여건 개선 및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투자

- '05년 중장기 농촌개발 및 삶의질 계획 도입, 이후 4차례 계획을 통해 21개 부처가 교육, 돌봄, 의료, 경제 등에 매년 7.64조원 투자(총 152.8조원)
- '10년 이후 과기부, 행안부, 국토부 등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에 투자

* 과기부 스마트빌리지 보급·확산, 행안부 디지털타운 조성, 국토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

□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광역단위 지역성장·균형발전 전략 추진

- '04년부터 개별 추진되어 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합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(지방시대위원회)

* 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」제정('23.6) 및 '지방시대 종합계획' 수립('23-'27)

- 초광역 협력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거대 경제 권역 형성 목표

- 인구감소지역은 별도 지원체계 구축(행안부)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정('22.6), 시·군 인구감소지역 지정('21) 및 지방소멸대응기금(연1조, '22~'31년) 등 도입

-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* 개념 도입

* 주민 + 통근, 통학, 관광 등의 목적으로 월 1회,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

관련 정책 현황 비교

	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	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	지방분권균형발전
법 예산	· 농어업인삶의질법('04) · 사업별 재정회계	· 인구감소지역법('22) · 지방소멸대응기금	· 지방분권균형발전법('23) ·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조직	·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위원회 (국무총리 소속)	· 행안부 (균형발전지원국)	· 지방시대위원회 (대통령 직속)
계획	·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 (제4차: '20-'24)	·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(제1차: '23-'26)	· 지방시대 종합계획 (제1차: '23-'27)
주요목표	· 전국 어디서나 삶의질 보장 ·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	· 경제 격차(일자리), 인프라 열악 (정주여건), 인구감소(사람) 극복	·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권 형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
대상공간	· 농어촌지역(읍·면)	· 인구감소지역(시·군)	· 국토 전체(시·도)

2 외국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

□ 일본은 ‘일자리와 사람의 흐름을 위한 지방창생 전략’ 추진

-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위기가 확산되자 지방창생법을 제정(‘15)하고, 제1기 지방창생정책(‘15~‘19) 및 제2기 지방창생정책(‘20~‘24) 추진
- 제1기 정책은 인구감소 극복(‘60년 1억 명 인구 확보)을 목표로 설정
 - 지방 일자리 창출,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 유도, 청년세대 결혼·출산·육아 지원, 지역거점 형성 등 추진
 - * 농업의 성장산업화, 지역 핵심기업 지원, 기업의 지방채용 확대, 지방대학 활성화, 청년 일자리 지원, 일-가정 양립 실현, 지방 도시 거점 형성 등
- 제2기 정책은 인구감소 완화 및 적응 관점으로 목표(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) 조정
 - 다양한 인재 활약, 기술 등 새로운 흐름 활용 등 방향 추가
 -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·기업·여성·노인·장애인·외국인 등 참여 확대 및 Society 5.0* 기반 기술 적극 활용, 지방행정시스템 개선 등 추진
 - * ‘16년 일본정부가 미래사회 개념(슈퍼 스마트 사회)으로 도입, 인공 지능 같은 다양한 기술과 사회의 효과적 통합을 강조

□ 프랑스는 범부처 차원의 프랑스의 농촌(France Ruralities, 2023) 추진

- 농촌아젠다(Rural agenda)를 통해 ‘19년부터 소외된 농촌지역 삶의질 개선을 위한 181개 정책 과제를 3년간 추진
 - * 디지털, 보건의료, 문화, 교육, 상업, 공공서비스, 고용, 경제활동, 생태 전환, 이동성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담은 중앙정부 정책의 총체
- 농촌지도 작성, 부처별 농촌담당자 지정, 범부처 협력 등은 농촌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정책 수단 확보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
- ‘23년 농촌아젠다를 발전·보완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대책, ‘프랑스의 농촌’(France Ruralities) 수립
 - * 38개 정책과제로 구성, 9개 주요 대책은 특별예산 편성
- 주민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, 농촌자원에 대한 보수, 농촌재활성화 지구를 통해 경제적 매력 증대 및 민간 서비스 유치 등 지원

□ 농촌 투자 확대로 생활 인프라 삶의 질 관련 지표는 개선

- 상·하수도 보급, 생활SOC 확충 등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확대

*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('15)71.0, ('21)81.6/ 군지역 하수도 보급률 ('15)67.7%, ('21)75.6

- 농어촌 시·군(139개)의 농어촌서비스기준*은 개선되는 추세

* 보건의료·복지(4), 교육·문화(5), 정주여건(9), 경제활동(1) 등 4대 부문 19개 항목

□ 중장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추세 반전을 위한 획기적 성과는 미흡

- 원격지 농촌의 교육·의료·문화 등 서비스 질은 상대적 저하
- 3,000명 이하로 감소한 면 지역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설, 필수 생활 서비스 제공 시설 등의 폐업 및 주민들의 일상적 불편 증가

□ 중앙정부 중심 양적·획일적 성장 모델이 효과성 저하의 주요 원인

-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산업 유치, 시·군 단위 인구감소 대응은 농촌의 다양성과 특성을 획일화
 - 인구 유입 등 양적 성장 목표하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를 추진하면서 과잉투자 등 문제 발생
- 지역에서는 주거, 경제기반 등에 대해 개별·분산적 투자 유치, 다다익선 선호 등으로 난개발 및 투자 효과성 저하 초래

□ 농촌소멸 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간 및 정책 전환 필요

- 도농간 차이 완화 및 평균적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특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농촌 맞춤형 전략 필요
 - 청년층, 도시민 등 농촌에 대한 외부 수요에 맞추어 공간 활용의 다양성 촉진할 규제 완화 필요
- 디지털 기술 선제적·적극적 활용을 통해 생산성·부가가치 제고, 사회 서비스의 공간적 제약 극복 및 접근성 제고

IV. 농촌소멸 대응 추진방향

1 농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

- 뉴노멀 시대 농촌소멸 대응 및 농업·농촌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해 「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」을 모토로 설정
 - 생산 등 농촌공간의 기능 회복이나 인구 유지를 위한 공간 채우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전환
 - 도시와 농촌간 이분법을 벗어나 사람·기업·농촌자원이 융복합(Melting Pot)되는 일자리, 주거,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형성
- 「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」을 위해 ‘창의적 공간’, ‘스마트 공간’, ‘네트워크 공간’ 등 3대 공간 전환 추진
 - 청년층, 혁신가, 기업가, 농업인 등이 모이는 「창의적 공간」
 - 농촌어메니티, 문화·농지 등 자원 제공, 창업공간 및 정주여건 향상을 통한 농촌형 창업 생태계 조성
 - 첨단기술 실험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「스마트 공간」
 - 농촌공간의 테스트베드화(test-bed), 리빙랩 및 농촌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경제·사회적 공간으로 전환
 - 집적화되고 기능적으로 연계된 「네트워크 공간」
 - 난개발을 벗어나 주거, 산업, 복지 등 기능 집적 및 집적된 기능이 연계되어 활성화되는 공간의 네트워크화
- 「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」에 부합하는 지원 체계 구축
 - 농촌공간 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주민과 수요자가 새로운 농촌을 계획하고 정부는 재정 등 통합지원
 - 농촌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고 인력·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위한 공세적인 제도 및 규제 혁신
 - 자조·자립, 연대·협력 등 지역주민 의지와 역량을 바탕으로 상생 등 민간 역량 활용 극대화

비전	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, 일하고, 쉬는 새로운 농촌		
목표	◇ 농촌 청년인구 22% 유지 : (‘23) 21.4% → (‘27) 22.0 ◇ 농촌지역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늘리기		
전략	◇ 새로운 농촌(New Ruralism 2024) 대전환		
	전략1 청년 등 창업 기회 및 농촌 자원 활용을 확대 하여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전략2 농촌 체류 · 교류 공간 및 도농 협력 강화를 통한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	전략3 주민 · 민간 협력과 디지털 기술 등 활용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
원칙	자율, 연대 · 협력, 융복합, 규제혁신		
세부 과제	①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	②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청년 혁신가 기업 등 창업 기회 창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청년농 및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스마트농촌 리빙랩 프로젝트농촌경제 및 Agribiz⁺ 혁신 모델 구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농산업 혁신벨트 조성농촌형 기회발전특구, 농 · 산지 활용 제고농촌경제 및 Agribiz⁺ 활성화 기반 조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농촌창업 네트워크 활성화자원정보 등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농촌 체류형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농촌빈집 활용 공간 재생농촌 · 산촌 관광 활성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유형 숲오피스 · 치유관광 활성화마을단위 관광자원 개발 농촌관광 품질 제고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농촌 3대 은행 등 정보 제공 확대백만 농촌 서포터즈 기업 등 농촌기여 촉진
	③ 농촌지역 삶의질 혁신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주거 · 일자리 ·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재생활성화지역 등 농촌공간계획 수립지역 주도 주민협정 도입 및 통합지원농촌 교육 · 문화 서비스 다양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농촌공동체 협력 교육서비스 다양화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공공병원 지원 강화, 농촌 왕진버스 등농촌돌봄마을,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서비스 전달체계 혁신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립적 공동체, 스마트기술 활용 등농촌자원 연계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
추진 기반	농촌공간계획, 농촌소멸위험지수, 농촌소멸대응특별위원회		

V. 세부 추진방안

1.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

1-1 청년, 혁신가, 기업 등의 창업 기회 창출

□ 청년의 농업 진입·성장 등 영농 창업지원 강화

- 청년농의 안정적 진입에 필요한 농지·자금 등 지원 지속 확대
 - * 맞춤형농지('24: 4,210ha), 후계농자금(우대보증 5억 원), 영농정착지원('24: 5천 명)
- 전문농업인으로 성장을 위한 경영·기술교육 및 영농규모화, 성장자금 지원 강화
 - * CEO양성과정('24: 280명), 청년기업전용펀드('24: 200억원), 우수후계농자금('24: 500명)

□ 창업 복합공간 등 중심으로 청년의 다양한 창업 기회 제공

- 농촌 유·무형 자원을 활용한 '농촌형 비즈니스 창업' 지원(중기부 협력)
 - * 로컬푸드, 농촌관광, 마을 브랜드 등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
- 창업 준비를 위한 자원조사 및 신규 창업·성장 자금, 컨설팅, 보금자리주택 등 농촌창업 단계별 종합 지원

< 지원 내용 >

예비·관심	창업준비	진입·성장	주거
농업·농촌 체험·교육	농촌자원조사	자금, 컨설팅	보금자리주택

- 시·군별 창업교육, 사업계획수립, 실험 실증 등 공간을 복합화하여 체계적·종합적 지원을 위한 '농촌청년 창업 콤플렉스(Complex)' 구축
- ##### □ 기술 실증, 컨설팅 등 농촌 창업·혁신기업 성장 지원
- 농촌 우수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전문 액셀러레이터(창업기획자) 매칭, 경영 진단·전문 멘토링 제공
 - R&D·수출·민간투자 유치 등 맞춤형 성장 지원
 - 기술 실증 희망기업 대상 마을 공유자원 등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지원하는 '스마트농촌 리빙랩' 추진
 - 농업 생산·유통·서비스 및 미래 농촌개발·돌봄 등 다양한 문제 해결 모색

1-2 농촌경제 및 Agribiz⁺ 혁신 모델 구축

□ **농산업 혁신벨트를 통한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(Agribiz⁺) 연계 발전 촉진**

-

<농산업 혁신벨트 구상도>

☐ 민간투자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혁신지구(농촌형 기회발전특구) 도입

- [illegibl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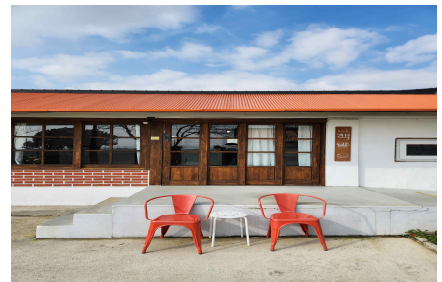
< 사례: 구례 자연드림파크 >

- ☐ 농지 · 산지에 기업 등 다양한 입지 수요 충족

- 10 -

□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분 조성

- 창업·혁신 아이디어 공유 및 발전을 위한 민간 자율 네트워크 활성화
 - 청년, 기업인, 전문가 참여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전국단위 포럼 등으로 시너지 창출('24)
- 다양한 주제로 농촌의 가치를 창출하는 청년들과의 현장소통*을 통해 농촌창업 성공사례 확산 ('24, ^(가칭) 전원일기(田園一企))
 - 우수사례 발굴·DB화,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및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등 개최



< 사례: 전북 김제 오느른 책방 >

□ 농촌자원 활용 확산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 구축

- 농촌형 비즈니스 등 창업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특산물·문화·유희시설 등 지역자원 정보 통합 안내
- 농촌자원 등 활용 관련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사업화 연계 지원을 위한 전국 아이디어 콘테스트 개최('25)

□ 다양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

- 기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위주에서 농촌형 비즈니스 및 Agribiz⁺ 활성화 분야까지 정책지원 대상, 내용 등 단계적 확대·개편
 - 조사·연구 및 전문가 양성, 자문·컨설팅, 창업·성장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 구축('24.下)

<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 방향 >

구분	기존	→	개편
지원 단계	농산물의 2·3차 가공 위주	→	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산업 전반
지원 대상	인증사업자 위주	→	예비 창업자도 포함
지원 내용	컨설팅, 판로 위주	→	정보 제공, 네트워크, 사업화 포함

2. 생활인구 · 관계인구 창출

2-1 4도3촌 라이프 확산을 위한 제3의 공간 조성

□ 도시민 수요 반영 농촌지역 체류형 심터 및 단지 등 도입

- 주말 체험영농 등을 위한 (가칭)농촌 체류형 심터 설치 허용(「농지법」 개정, '24)
- 지자체 등 (가칭)농촌 살아가기 체험농원 조성
 - 거주공간, 농장, 체험프로그램 등 함께 갖춘 단지 및 국산목재 활용 산촌 체재공간 조성
- 농촌 소멸고위험지역 내 세컨하우스 신축·리모델링 시 건축비용(주택개량용자)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



< 사례: 일본 체재형 시민농원 >

□ 농촌빈집 정비 · 거래 · 관리 등 활용 활성화

-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특례 확대* 및 매매가능한 빈집 정보 관리와 민간 플랫폼 연계를 통한 빈집 거래 활성화('24)
 - * ①지역 확대(5개도→ 전국), ②대상 확대(50채→ 500), ③영업일 수 제한(300일) 폐지 등
-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·패널티 제도 운영* 및 농촌빈집 체계적 관리·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('25)
 - * 재산세 경감(별도합산과세 적용기간 연장 등)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(1.1, 행안부) 이행강제금 부과(특정빈집 철거명령 미이행시)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(1.2, 시행 7.3)

□ 도시-농촌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빈집 재생

-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정비지구로 지정하여 체류 및 거주공간 조성·공급
 - * 유희시설 지역 활성화 사업 지속 지원 및 빈집우선 정비구역 지원 가능 사업 발굴



< 사례: 서천 카페329 >

- 빈집 활용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지원 희망기업을 연결하는 기업-지자체 합동 농촌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(대 · 중소기업 · 농어업협력재단 협력)

2-2 농촌·산촌 관광 활성화

□ 새로운 관광 수요 대응 농촌·산촌 위케이션 및 치유관광 활성화

- 기업의 업무·체류 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등 농촌 위케이션 활성화 지원(농어촌상생협력기금 협력)
 -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림, 휴양지 등 활용한 공유형 숲 오피스 조성 추진('25, 산림청)
- 농·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·운영, 전문인력 양성 등 농림 분야 치유산업 발전방안 마련('24)
 - * 관련 기관 간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(치유정책협의회: 농식품부-해수부-농진청-산림청)

□ 특색있는 농촌·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

- 지역의 역사성, 특화음식, 특산품 등과 연계한 시·군별 테마상품 개발·운영('농촌 크리에이티브', '24~)
- 외식, 지역개발 기업 등과 지자체 공동 협약으로 마을단위 관광자원개발('25~)
 - 지역의 미식자원(식품명인·향토음식 등)과 경관자원 등을 융합한 미식벨트 조성과의 연계
- 동서트레일, 명품숲 등을 플랫폼으로 머물고 싶은 산촌공간 조성(산림청)
 - 민간 자본 활용 동·서 횡단 장거리 숲길 조성(~'26)
 - 자작나무숲 연계 숲길 조성 및 체류형 프로그램 도입('24, 경북 영양)



< 사례: 정선 마을호텔 18번가 >



< 동서트레일 (태안~울진) >

□ 숙박, 음식, 안전 등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

- 농촌민박 규모 등 운영 요건 개선 및 숙박 서비스·안전성 제고 지원* 등 농촌민박제도 개선방안 마련(5월)
 - * 위생·안전 점검 컨설팅, 객실·시설 등급 평가,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등
- 농촌체험마을 시설·서비스 등급제 활성화 및 민간 전문가 운영 참여 등 농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 제고

2-3

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

□ 농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 등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

- 농촌 체험·정착 등 정보를 제공하는 「농촌 3대은행」 운영(‘24.下)
 - 빈집정보 제공을 위한 ‘빈집은행’ 및 농지 매입·임대를 지원하는 ‘농지은행’, 도시민 등 재능 활용 현장을 매칭하는 ‘재능은행’ 지원
- 서비스 관련 일자리 정보 안내를 위한 ‘소소한 일 점빵’ 모델 개발(‘25~)
 - 장보기, 빨래대행 등 지역 필요 서비스 일자리를 온·오프라인을 통해 도시민, 서비스 공동체(단체) 등에 알선 지원

□ 미래 세대 및 전 국민 대상 농업·농촌 가치공유

- 자원봉사와 농촌여행을 함께 체험하는 ‘농촌 일손여행’ 추진(‘25)
 - 농촌체험·교류 중심으로 일손돕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(행안부 1365 자원봉사포털 협력)
- 백만 농촌 서포터즈 육성 및 전국민 1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범국민 대상 가치공유 운동 추진(농협 협력)
 - 고향사랑기부자, 대학생, 소비자 단체 등 체계적인 농촌 응원단 조직하여 세대간·도농간 연계 및 농촌 가치확산

□ 기업, 단체 등 민간의 농촌기여·협력 촉진

- 지역농협 등을 활용한 도·농상생 및 농촌주민 복지증진 지원 사례 확산

* 부안농협: 마을순회 이동세탁차량 정기 운행 등 농촌주민 삶의질 향상 지원

수원농협: 도농상생자금을 조성하여 농촌농협에 전달



< 진천농협 이동세탁 차량 >

- 기업들의 ESG 경영의무 강화 기조를 반영하여 농어촌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및 농촌소멸 대응* 활용

* 농촌 교육·장학사업, 주민 복지 증진, 농촌개발 및 활성화, 민간기업과 지역 협력사업 등

3. 농촌 삶의 질 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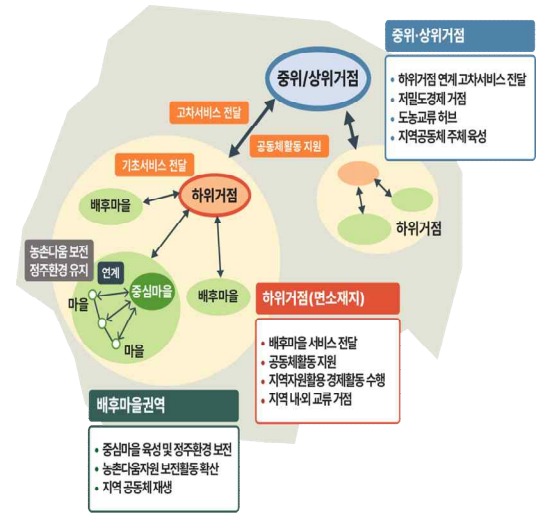
3-1 주거·일자리·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

□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

-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139개 시·군별 3개 내외 '재생활성화지역' 설정 (400개, ~'31)

- 농촌특화지구 활용한 주거, 산업, 서비스 기능 계획적 배치

- 중심지에 서비스 제공기관 집적 및 인근 도시와 연계, 소멸위험 마을은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

<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 >

- 마을 난개발 시설 정비(이전·철거) 지원으로 주거·일자리·서비스 등 농촌공간의 기능 재생(농촌공간정비사업: '24, 99개소)

□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통합 지원

- 주민 주도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제안·주민협정 제도 도입('24)
 - 주민·기업 등 지역 주체가 제안하는 살아있는 아이디어 실행 지원
 - 농촌 마을의 인구·경제 여건 변화 및 고유 잠재력을 바탕으로 유형별 발전 유도

* (예) 고령 친화 마을, 체험·교육 특화 마을, 문화예술 특화 마을

-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담아 계획을 수립하면, 중앙-지자체 간 농촌 협약 체결로 계획에 따른 국비 사업 통합 지원('24, 95개 시·군)
 -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타부처 사업, 지자체 사업, 민간투자 등 포함하여 계획 수립

3-2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

□ 농촌에 이용가능한 병의원 시설 · 인력 지원 강화

- 농촌지역 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접근 제고를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확충 지원(복지부)
 - * 지방의료원 35개소, 적십자병원 6개소
- 시설, 장비 등 현대화 지원 및 의료인력 파견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 의사인력 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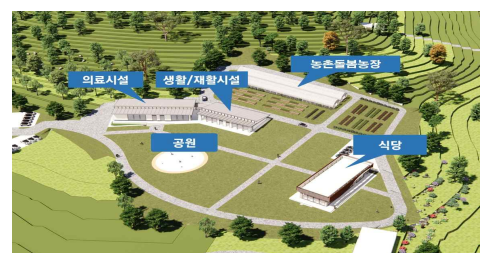
□ 농촌 의료분야 민간협력 · 방문 서비스 등 활성화

-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'농촌 왕진버스' 운영('24)
 - 의료단체, 병원, 농협 등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1차 의료서비스 제공
- 보건소, 보건진료소 등 중심으로 찾아가는 원격협진 체계 구축(복지부)
 - 모바일보건소 시스템(MPHIS) 도입으로 의료인이 모바일로 지역 보건 · 의료서비스 수행
 - * (기존) 보건소·보건진료소 내원 원격협진 → (개선) 가정 등 찾아가는 원격협진

□ 농촌주민 등을 위한 특화된 돌봄·의료 서비스 제공

- 농촌 돌봄마을* 내 의료시설 조성으로 의료·돌봄 거점마을로 육성(지자체 협력)

* 복지시설, 농장, 주민교류센터 등을 통해 농촌 자원 활용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



< 농촌 돌봄마을 개념도 >

- 간호사·복지사 등 상주를 위한 급여, 주거 등 정주 여건 보장
- 농작업성 질환 조기 예방을 위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 확대('24)
 - 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
3-3 농촌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

□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

- 지역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 및 지속가능한 농촌학교 우수사례 확산
 - 농촌학교 공모전을 통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사회와 협력 등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 사례 발굴
- 농촌유학 활성화*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·협력(교육청·지자체 등) 등 제도 기반 마련('25)

* (기존) 농촌유학센터 중심 → (개선) 가족체류형, 홈스테이형 등 수요자 맞춤형 확대

▶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사례

- 의령군 지역 모든 초등학교를 3개 권역으로 묶어 지역사회와 연결한 교육과정 운영
- 교과 수업, 방과후 돌봄까지 함께 운영하고, 공동 수업을 위해 거점학교 공간 재구조화



< 의령군 캠퍼스형 공동학교 >

□ 농촌공동체와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

- 읍·면 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등 인프라 활용 확대 지원(교육부)
 - 유아 돌봄·놀이 시설 확보, 농촌주민 평생교육 과정 운영, 농촌주민 여가 시설 등 복합 공간 조성
 - *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당 학교복합시설 1개 이상 설치 목표('23~'27)
- 유휴시설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주민 참여 확대 추진
 - 폐교 등 농촌 유휴공간에 창작, 전시 등 예술 활동 및 교육, 지역 교류 등 공간 조성·활용
- 농촌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와 연계·협력
 - 도시학생·교원 대상 농촌체험활동 정보 제공(창의인성교육넷)
 - 읍면 소재지 청소년 돌봄센터 화상교육시스템 구축
 - * 온라인 학습·도서 콘텐츠, VR(가상현실) 기반의 체육활동 콘텐츠 제공 등

3-4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

□ 농촌주민 자조·자립 기반의 서비스 공급

-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등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 육성·확대('24, 130개)
 - 주민공동체를 통한 부족한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민간업체 연계 지원 등 지역 여건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확산
 - * 주민공동체 반찬나눔 활동, 셀프 빨래방 운영, 집수리업체 연계 주거환경 개선 등
- 농촌주민 서비스 이용경로 추적, 특성 파악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 연구 추진

□ 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·복지·교육 서비스 확충

- 주민 수요 반영한 주문형 셔틀버스 등 수요응답형 운송 서비스 추진
 - 배차간격 단축, 노선조정 등 주민공동체 주도의 탄력적 버스 운행 지원
- 보건기관과 마을을 ICT 기반 지능형 서비스로 연결하여 돌봄, 생활 서비스 등 제공하는 '농촌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' 구축
 - * 건강상담, 치매진단 및 예방활동, IoT 헬스케어, 오락, 복지상담 등



< 사례 인천시 수요응답형 버스 >

□ 유희시설 등 농촌자원과 연계한 민간역량 활용 활성화

-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 주민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이웃의 이동을 돕고, 정부는 보험료, 유류비 등 지원 추진
- 민간과 협력하여 중심지,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보완
 - 중심지 복합생활서비스 시설의 민간 활용 지원 및 귀촌자, 농촌주민 참여를 위한 인력 등 기준 완화
 - 지자체 및 민간 협력으로 농촌마을 이동식 생활서비스 지원 및 유희시설 활용 무인 서비스터미널 설치·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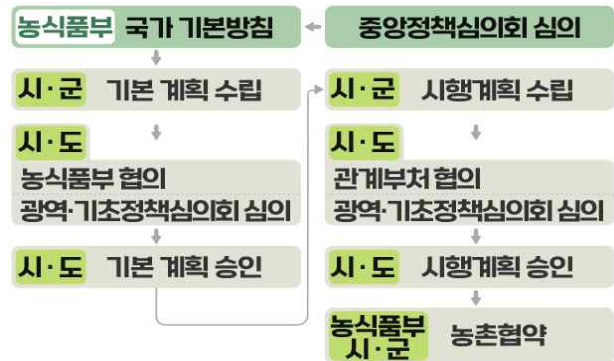
VI. 정책 추진기반

□ 농촌소멸대응 플랫폼으로서 농촌공간계획 수립

- 농촌소멸 대응을 목표로 공간 재구조화* 및 재생을 위한 중앙·지자체 계획수립

* 재생활성화지역, 특화지구, 서비스 전달체계 등

- 국가 기본방침('24) 및 139개 시·군 기본계획 수립('25~)



< 농촌공간계획 수립 체계 >

- 시·군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관련 타부처 사업계획 포함(연계)
 -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농촌소멸위험도 측정 지표 개발 및 전담지원기관 등 도입

- 읍·면 인구구조 및 농업·농촌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소멸위험도를 세분화하는 방안 검토
 - 인구감소지역(행안부)과 연계 등 지자체·관계기관 등 의견수렴
- 광역 단위 (가칭)농촌센터(Rural Planning Center)의 단계적 설립 유도
 - 시·도 여건에 따라 농촌공간지원기관과 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동일 기관에 지정('24), 나머지 지역도 단계적 통합 추진('25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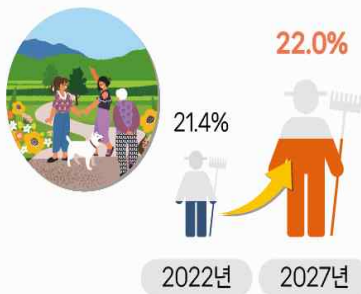
□ 삶의질 계획 혁신 등 범부처 차원의 농촌소멸 대응 추진체계 구축

- 제5차 삶의질 계획('25~'29)부터 농촌소멸대응 중심으로 전환 및 다부처 협업 과제 지속 발굴
-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및 범부처 공동 토론회 개최 등 범국민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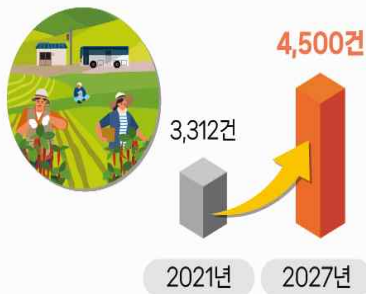
VII. 기대효과

청년과 기업이 성장하는 농촌

농촌 청년인구 22% 유지



농촌 신규 창업 증가



농촌융복합산업 규모 확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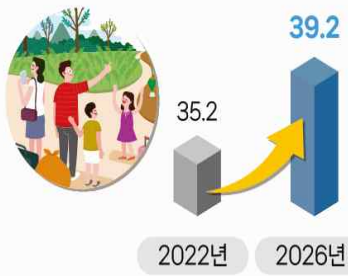
4도 3촌 라이프스타일을 전국민의 삶, 문화로 정착

제3의 공간 조성



농촌 체류형 센터 도입 및 체험농원 조성

농촌관광 경험을 증가



특색있는 관광 공간 조성

백만 농촌서포터즈 육성



농업·농촌 가치공유·확산

국민 누구나 큰 불편없는 농촌 생활

농촌주민 정주 만족도 향상



생활soc복합센터 보급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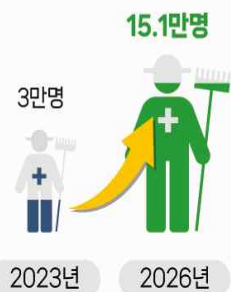


농촌 의료 접근성 제고



농촌 왕진버스 운영

여성농 특수건강검진 확대



참고

과제별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일정	소관부처
1.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		
[1] 청년, 혁신가, 기업 등의 창업 기회 창출		
○ 청년의 영농 창업 지원 강화	'24.上	농식품부
○ 청년의 다양한 농촌 창업 지원	'25.上	농식품부
○ 농촌 창업·혁신 기업 성장 지원	'24.上	농식품부
[2] 농촌경제 및 Agribiz+ 혁신 모델 구축		
○ 농산업 혁신 벨트 조성	'25.上	농식품부
○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	'24.下	농식품부
○ 농지·산지 입지 수요 충족	'24.下	농식품부·산림청
[3] 농촌경제 및 Agribiz+ 활성화 기반 조성		
○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창업붐 조성	'24.上	농식품부
○ 농촌 자원 활용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등 구축	'25.上	농식품부
○ 농촌경제 지원 체계 정비	'24.下	농식품부
2. 생활인구·관계인구 창출		
[1] 4도3촌 라이프를 위한 제3의 공간 조성		
○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및 살아보기 체험농원 등 도입	'24.下	농식품부·산림청
○ 농촌빈집 정비·거래·관리 등 활용 활성화	'24.上	농식품부
○ 도시-농촌 교류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빈집 재생	'25.上	농식품부
[2] 농촌·산촌 관광 활성화		
○ 농·산촌 워크케이션 및 치유 관광 활성화	'24.上	농식품부 산림청·농진청
○ 농·산촌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확대	'25.上	농식품부·산림청
○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 제고	'25.上	농식품부
[3] 다양한 인재와 농촌과의 관계 강화		
○ 도시민 등을 위한 농촌정보 제공 확대	'24.下	농식품부
○ 미래 세대 및 전 국민 대상 농업농촌 가치 공유	'25.上	농식품부·농협
○ 기업, 단체 등 민간의 농촌기여·협력 촉진	'24.上	농식품부
3. 농촌 삶의질 혁신		
[1] 주거·일자리·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 조성		
○ 언제 어디서나 삶에 불편이 없도록 농촌 생활공간 재구조화	'24.上	농식품부
○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통합 지원	'24.上	농식품부
[2] 농촌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		
○ 농촌에 이용가능한 병원 시설·인력 지원 강화	'24.上	복지부
○ 농촌 의료분야 민간협력·방문 서비스 등 활성화	'24.上	농식품부·복지부
○ 농촌주민 등을 위한 특화된 돌봄·의료 서비스 제공	'25.上	농식품부
[3] 농촌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		
○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체제 구축	'24.下	농식품부
○ 농촌공동체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·문화 서비스 다양화	'25.上	농식품부·교육부
[4]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		
○ 농촌주민 자조·자립 기반의 서비스 공급	'24.上	농식품부
○ 스마트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·복지·교육 서비스 확충	'24.上	농식품부
○ 유희시설 등 농촌자원 활용한 민간역량 시너지 창출	'25.上	농식품부